

# '제 식구 감사기' 여전한 전남도의회

부인 어린이집·요양병원 운영 의원 소관 상임위·예산안 심사  
'의회 행동강령 조례' 안 지키는 의원 징계 할 지 미지수

전남도의회가 스스로 만든 '의회 행동강령 조례'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 지역 민들의 눈총이 따갑다. 특히 도의회는 해당 조례를 위반한 경우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도의회 58명 중 54명이 특정 정당인 민주당 출신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체 징계는 커녕, 신고가 이뤄질 지는 회의적이다. 이들을 공천한 민주당 전남도당의 책임론도 제기되면서 전남도당이 '이해충돌 회피'를 규정한 조례를 무시하고 상임위 활동을 벌인 일부 의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일부 도의원들은 지난달 의원 본인, 4촌 이내 친족,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재직 중인 법인 단체 등이 의안·예산·행정사무감사·조사 등 안전과 관련한 직무 관련자인 경우 미리 의장단에 신고하고 안전심사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의회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당장,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근석(민주·비례) 의원은 배우자가 전남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도,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며 예산안 심사에까지 참여하고 있다. 한 의원이 속한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도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차별 운영비 지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애초(17억7100만원)보다 18억8900만원 늘려 36억6000만원으로 증액, 통과시켰다. 예산이 저출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예산인데다, 집행부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의회 스스로 증액한 점,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어린이집에만 지급키로 하면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터져나왔다.

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11월 12일)때도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차별 운영비 지원을 거론하는가 하면, 어린이집의 운영난을 거론하기도 했다. 사업유치원·어린이집 사태를 언급하면서 "자기가 50명에 살든, 100명에 살든, 10명에 살든

본인들 능력에 따라 자기가 벌어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요"라고 발언한 사실도 공개됐다.

오하근(민주·순천) 의원의 배우자가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소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안·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오 의원은 이번 어린이집 예산 증액을 요구한 장본인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요양병원과 관련, "제가 병원 쪽 일을 하다 보니가 가능하면 그쪽 질문을 안 하려고 하는데..."라고 하는가 하면, "국가에서 건물 지어줘, 장비해줘, 병상 늘려줘, 리모델링해줘 이것은 오히려 민간시장에 대한 역행이고 자유경제에 대한 역행이요"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그러나 지난달 도의회가 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에게 관련 신고조차 하지 않는 등 조례를 위반했고 관련 사실조차 모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그런 조례가 있는지 몰랐다"고 했고 오 의원은 또 "상임위원회가 아닌, 안전심사위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예결위원들이 다른 의원들도 다 사업과 연관이 있는데 그러면 (예산 심사때) 예로

사상이 있지 않느냐"고도 해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관련 조례가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도의회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채워졌다. 점에서 제대로 이뤄질 지 미지수다. 이들을 공천한 민주당 전남도당의 허술한 후보 검증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와관련, 오는 16일 한 의원의 민간어린이집 예산안 논란을 도당윤리심판원에 보고할 방침으로, 한 의원이 보건복지위 소속 상임위원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관련 조례와 규정 등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그리고 당원으로서 적절하게 행동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주의 경고·당원 자격정지·출당조치 등의 결정을 내리지만 실제 진행될 지도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도의회 예산안 심사에 관한 지역 여론이 매우 나빠 윤리심판원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윤리심판원은 외부인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공정하게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2019 목민상 시상식'에서 광역단체장으로는 최초로 목민상을 수상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용섭 광주시장, 이경채 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장.

## 소상공인 지원 정책 성과 이용섭 광주시장 '목민상'

이용섭 광주시장이 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2019 목민상 시상식'에서 목민상을 수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7년부터 매년 지역 소상공인 권익과 경쟁력 제고에 공헌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 의원을 선정해 '목민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 시장의 수상은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 출시·운영, 빛고를 소상공인 지킴이 등 광주만의 독특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펼친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결과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아울러 민생경제 현장 투

어를 통한 소상공인과의 소통 강화, 전통 시장 활성화 정책, '골목상권 특례보증' 등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시장은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성장·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사업여건 개선과 권익보호가 절실하다"면서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정책들을 꾸준히 발굴하여 일자리도 창출하고 사회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철새도래지 주변도로·가금농장 매일 소독"

김영록 지사, AI 대책 점검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타 지역에서 야생조류 저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검출됨에 따라 일선 시·군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5일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AI 중점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저병원성 AI는 강원 1곳, 경기 2곳, 충북 2곳, 충남 4곳, 경북 4곳, 경남 2곳, 전북 1곳 등이 검출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점검회의에서 "12월은 도내 겨울철새 서식 개체가 가장 많아 고병원성 AI 발생위험이 높은 시기로 철새

도래지(18개소)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필요하다"며 "군 제독차량, 광역방제기, 시·군, 농협의 소독차량을 총 동원, 도래지 주변도로 및 인근 가금농가에 대해 매일 소독을 나설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어 "농장단위 차단방역에서 축산차량이 가장 위험하므로 농장 내 축산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축사 내 온도관리, 농장 주변에 생식회를 충분히 살포하면서 종오리 농장의 산란율·폐사를 확인, SNS를 통한 AI 방역요령 지속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의회, '보좌관 급여 착복' 나현 시의원 징계 착수

보좌관의 급여 착복 의혹이 제기된 광주시의회 나현 의원이 자진사퇴를 거부하자 시의회가 공식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주시의회는 5일 제28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공식 회부했다.

김동찬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장이었던 나 의원의 사퇴에 따라 송형일(민주·서구3) 의원을 윤리특별위원으로 선임했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6일 오후 4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의회 내부에서는 나 의원의 보좌관 급여 착복을 파렴치한 행위로 보고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이 지난 4일 나 의원의 자진 사퇴를 권유했으나 나 의원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은 7일 윤리심판원을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해양쓰레기 제로화 업무협약 5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2019 전라남도 새마을지도자 대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이용재 도의회 의장, 이귀남 전남새마을회 회장, 조영애 전남새마을부녀회 회장 등 새마을 지도자 회원 등이 '해양쓰레기 제로화 업무협약식'을 갖고 있다.

## 광주시 건축물 안전점검 219곳 위법 적발

9~11월 831곳 점검  
불법증축·용도변경 등

광주시는 최근 3개월간 진행한 건축물 특별안전점검 결과 219곳에서 26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점검은 올 여름 광주세계수영대회 기간 발생

한 광주 상무지구 클럽 내부구조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뤄졌다.

점검은 건축분야, 보건식품위생분야, 문화관광분야 등 3가지로 나누어 모두 831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건축분야에서는 165곳에서 불법증축, 불법 용도변경, 조경훼손, 주차장기준 위

반 등 214건이 적발됐다.

보건식품위생분야에서는 건강검진 미실시, 영업장 면적 불법확장 등 52건이 적발됐다. 문화관광분야에서는 영업장 면적 미등록, 안내문 미부착 등 위법사항이 2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총 999곳에 대해 3단계로 나눠 실시한 '불법건축물 근절

및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점검' 결과는 모두 295곳에서 40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1단계 클럽 유사시설 81곳 중 46곳에서 82건, 2단계 유흥업소 87곳 중 30곳에서 50건이 적발된 바 있다.

위반 시설·업소 37곳은 시정 완료됐고, 12곳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246곳은 현재 시정명령 조치 중이다. 광주시는 시정 기간 내 시정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